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¹⁾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출범 첫해가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정부 2년 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2026년 5월 20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소멸 위기, 저출생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①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②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③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 계와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3대 방향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AI 시대 교육 혁신,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K-교육 확산 등 6대 분야별 성과와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분야별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소멸 위기, 저출생 대응 등 국가적 과제와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6대 분야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추진 방향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AI 시대 교육 혁신’과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을 주요 분야로 설정하였다. ‘AI 시대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생애단계별 AI 인

1) 본 고는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그림 1] 국민주권정부 교육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주: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내용을 재구성함.

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분야에서는 학교와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두 번째 추진 방향인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은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와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추진 방향인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

교육,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한국어교육, 국내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첫해에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정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3대 추진 방향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3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교육 분야 주요 성과

가.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그림 2] AI 시대 교육 혁신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주요 성과	향후 추진계획
초·중등	▶ AI 중점학교 및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 확대('25. 2,336교, 19.6% → '26. 3,307교, 전체 초중고의 27.7%) ▶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AI·SW 교육 지원 확대(14교→전체 27교) ▶ 마이스터고 AI 활용 교육과정 중점 운영교 7교 지원 ▶ 질문하는 선도학교 308개교 선정	▶ 초·중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26.2학기) 및 AI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26.12) ▶ 대학·기업·영재학교·과학고 연계를 통해 고도화된 AI 분야 학생 R&E 지원 ▶ AI·SW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3교 내외) ▶ 질문 중심 수업·평가 우수사례 자료 보급
고등	▶ 학·석·박 패스트트랙 도입 ▶ AI·AX 부트캠프 50교 신규 운영 ▶ 두뇌한국 21 17개 AI 교육연구단 운영	▶ AI 거점대학 3교 선정 ▶ 이공 우수인재 전주기 성장 지원(학생 400명) ▶ 5단계 두뇌한국 21 기본방향 수립
평생	▶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24개 선정 ▶ 성인 AI 교육 10만 명 지원	▶ K-MOOC 등 신규 강좌 개발 ▶ AX 등 제조산업 실무역량 지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소멸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교육 혁신'과 '지역과 교
육의 동반 성장'을 주요 분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
을 추진하였다.

1) AI 시대 교육 혁신

교육부는 2025년 11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AI)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대학의 전문인재 양성과 성
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강화까지 연결하는 AI 인재양
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
용 연구·선도학교를 2025년 2,336교에서 2026년
3,307교로 확대하였으며,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A
I·소프트웨어 교육 지원도 14교에서 전체 27교로
확대하였다. 또한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308교
를 선정하고, AI 활용 선도교사 7천명 양성을 추진
하는 등 교사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병
행하였다. 고등교육에서는 학·석·박 통합과정을 도
입하여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AX 첨단산
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운영하여 약 4,200
명의 AI 실무인재를 양성하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는 K-MOOC와 산업맞춤형 단기직무능력과정 등
을 통해 성인 학습자 10만명에게 AI 교육을 제공하
고,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24개 사업
단(35개 전문대)을 선정하였다.

향후에는 초·중등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2026년 2학기에 보급하고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2026년 12월까지 개발하는 한편, AI 거점대학 3교
를 선정하고 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3교 내외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2)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분야에서는 지역의 학
교와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여 지역
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율형 공립고는 2024년까지 100
교에서 2025년 125교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10교

[그림 3]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주요 성과	향후 추진계획
지역 우수학교 확대	▶ 자공고 125교 운영 ※ (~'24.) 100교 → ('25.) 125교(+25교) ▶ 협약형 특성화고 20교 운영 ※ (~'24.) 10교 → ('25.) 20교(+10교)	▶ 자공고 공모 및 추가 선정 ▶ 협약형 특성화고 추가 선정('26. 10교) 및 법령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지방대 지원 기반 조성	▶ RISE 체계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29,429개 기업 및 130만명 참여) ▶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 비수도권 공공기관 의무채용 확대 ※ ('24년) 9,513명 → ('25년) 12,742명(33.9% ↑)	▶ 앵커체계를 통한 초광역 과제 추진, 학생 체감 과제 중심 재구조화 지원 ▶ 성장엔진 연계 패키지 지원 3교 선정(교당 약 1,000억원 추가 지원) ▶ 거점국립대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 ('25. 42명 → '30. 80명)
지역 학교 체제 유연화	▶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26년 기준, 104개)	▶ 교육혁신선도지역특별법 제정 및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수립·발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4.

에서 20교로 확대되었다.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는 학생 지원과 지역 정착을 강조하는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되었으며, 29,429개 기업과 약 130만명이 참여하였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024년 9,513명에서 2025년 12,742명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대학의 입학 경쟁률도 2025학년도 5.86대 1에서 2026학년도 6.54대 1로 상승하였다.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도 2026년 기준 104개로 확대되었다.

향후에는 인구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나.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1)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였다. 유아 무상교육·보

육 지원 대상은 2025년 5세 약 27만 8천명에서 2026년 4~5세 약 50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하였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2025년 56개소에서 2026년 2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수도 전년보다 29% 증가하였다.

초등교육에서는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운동내 초등돌봄·교육’ 체제로 발전시켰다. 2026년 3월 기준 208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돌봄·교육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10만 8천명 증가하였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지원도 강화하였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여 진단검사와 보정학습 자료 등을 통합 제공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639명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였다. 기초학력 협력강

[그림 4]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 '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27.8만명 지원 및 '26년 4~5세 50.3만명으로 지원 확대 → 유치원 납입금 41.4% 및 어린이집 등 이용료 18.3% 감소 ▶ 돌봄 서비스 다양화로 맞벌이 가구 부담 해소 →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29% 증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220개 운영	▶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3~5세로 확대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운영 ▶ 아침·저녁·휴일 돌봄 지원
운동네 초등돌봄· 교육	▶ 기초지자체 92%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초등 3학년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제공 → 국가 돌봄 교육·보육 지원 초등학생 '25년 대비 10.8만명 증가 (초등 3학년 4.3만명 증가)	▶ 방학 중 특색 돌봄·교육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 20개 내외 선정('26.6월~) ▶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확대('27년)
기초학력 보장 강화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운영('26.3.) ▶ 기초학력 전문교원 도입 및 초교 집중 배치('26. 639명) ▶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한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근거 마련	▶ 기초학력 협력강사 배치 확대를 통한 수업 중 개별화지도 강화 ('25. 4,481교 → '26. 6,000교 목표) ▶ 방과후·방학중 초·중고 학생 6만명 대상 1:1 멘토링 운영('26년 신규 운영) ▶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25. 5개 → '26. 11개 운영 예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학교 3교 개교 및 특수학급 1,018학급 신·증설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교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개선 ▶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4교 추가 선정 및 사업 내실화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법 시행령 마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6.

사 배치학교도 2025년 4,481교에서 2026년 6,000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특수학교 3교를 개교하고 특수학급 1,018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장애 대학생 지원 선도대학 10교를 운영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2)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학교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보완하였다. 마음 EASY검사 실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57% 증가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 150명을 증원하고 위기학

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하였다. 피해교원의 마음 돌봄휴가는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되었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55개에서 83개로 늘어났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민원대응팀을 법제화하고 관할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원 불공정 행위, 영유아 사교육, 교복가격,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였다. 향후 학생 선별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정서교육 시간 확대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특이 민

[그림 5]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학생 마음건강 지원	▶ 마음EASY검사 활성화(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 ▶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 법제화	▶ 학생 선별검사 개선 방안 마련 ▶ 사회정서교육 시간 확대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피해교사 마음돌봄휴가 확대(5일→10일)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25. 55개 → '26. 83개)	▶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기준 상향 ▶ 특이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 규정 ▶ 교육활동보호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 정상화 추진	▶ 교육 정상화 추진 전담팀 구성·운영 ▶ 범부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7개 선정 및 개선 관리	▶ 상반기 선정과제 7개 지속 개선 및 진행상황 대국민 알림 ▶ 하반기 교육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9.

원인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정상화 분야에서는 상반기 선정 과제 7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다.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1)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과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였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교를 선정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1,931개 학급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헌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 선도교사단과 역사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기후·환경교육에서는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 550교를 선정하여 태양광 설비와 교육활동을 연계하고,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하였다. 향후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2030년까지 전체 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햇빛이음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6]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 '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26.1.30.) ▶ 전문강사 헌법교육 확대(1,931개 학급)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선정(357교)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26.2.27.) ▶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550교) 선정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속 확대 ▶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전체 공립 초·중·고 대상 햇빛이음학교 확대(~'30.)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10.

[그림 7] K-교육 확산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국립대 2교 해외 진출 MOA 체결 ▶ 캄보디아 1호 현지인 한국어교원 배출('26.3월 11명)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학급 확대('25. 557학급 → '26. 629학급) ▶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 ※ 이주배경학생 → 학교 밖 아동·청소년('26.4.9.~)	▶ 정상회담 등 계기 한국어 정규 교육과정 채택 국가 지속 확대(계속) ▶ 한류 콘텐츠 등 활용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재 신규 개발('26년) ▶ 한국어교원 93명 파견(~'26.9월), 현지인 교원 700여 명 양성(15개국, ~'27.상) ▶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국내외 모든 학습자에 확대('26.12월~)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5. 20.),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향해 한걸음: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11.

2) K-교육 확산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의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대학과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인 교원 파견과 현지인 한국어교원 양성을 확대하고,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교재 개발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학급을 2025년 557학급에서 2026년 629학급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한국어 학습용 디지털 기기 1천대를 보급하였다.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도 이주배경학생에서 학교 밖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내외 모든 한국어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4 맺음말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및 K-교육 확산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AI 시대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의 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AI 전문인재 양성과 성인 대상 AI 교육을 함께 추진하였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분야에서는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기존 RISE 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확대하였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추진하였다.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육 정상화 분야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헌법교육과 학생 자치활동, 역사교육 및 기후·환경교육을 확대하였으며, K-교육 확산 분야에서는 국립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한국어교육, 국내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첫해를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 기반을 조성한 시기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2년 차인 2026년 하반기부터는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 교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